

외국기업, 제약 가이드라인 “반발”

다국적의약협회, 표준계약서는 규율 현실성 떨어져 ... 제정 철회 요구

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제정한 <의약품 공급·판매 표준계약서>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(KRPIA)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.

KRPIA는 1월11일 성명서를 통해 “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돼야 하며, 최소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또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제약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거세게 반발했다.

KRPIA는 “(가이드라인 제정이)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수렴은 불과 20여 일 만에 강행됐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제약기업 사이의 특허 라이선스, 공동마케팅 등은 계약마다 성격과 내용이 달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”라며 “확실적인 표준계약 조항을 만들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을(의약품 구매 제약기업)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조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공정위는 1월9일 제약기업이 의약품 거래 계약을 맺을 때 경쟁제품의 판매를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판매목표량을 정해두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.

가이드라인은 판매목표량이나 최소구매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경쟁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.

또 계약기간 중 취급이 제한되는 경쟁제품의 범위도 축소토록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11>